

낙농역사 새 장을 열다!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연말이면 늘 그렇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부터 불어 닥친 구제역 광풍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원유가 현실화 투쟁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 속에 험난한 협상을 넘어야 했다. 유우가격은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한·미 FTA 국회비준은 여당의 단독처리로 끝을 맺었다.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으로 우유수급의 빨간불이 켜지고, 생존을 위한 원유가 현실화 투쟁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단박에 이슈의 중심에 섰다. 유우가격 폭락은 송아지 값 3만원의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한·EU FTA에 이은 한·미 FTA 국회비준은 우리 농축산업을 최대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당국은 우유수급 문제를 할당관세 물량 확대로, 원유가격 현실화는 물가 안정으로, 유우를 포함한 국내 소 값 폭락은 무대책으로, 한·미 FTA에 대비한 피해대책은 재탕, 삼탕 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 속에서도 우리 낙농유우인들은 희망젖소 나눔운동과 7.26 총궐기대회와 8.10 납유거부 투쟁을 정점으로 한 우유항쟁, 원유가격 연동제를 비롯한 낙농제도개선 촉구, 유우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홍보 활동, FTA에 대응한 정책개발 등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와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낙농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원유가 현실화 투쟁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지난 여름의 원유가 현실화 투쟁은 낙농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물가안정, 유업체의 시간끌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협상이었다.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낙농진흥회 출범 이전 정부고시에서 낙농진흥회 출

범 이후에는 생산비 변동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4,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원유가격 현실화 투쟁 역시 이전에 겪었던 똑같은 문제들만 반복, 재생되었다. 7.26 전국 낙농육우인 총궐기대회와 이후 단식농성, 사상초유의 전국적인 집유, 납유거부 투쟁은 현재 낙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각축장이었다.



낙농역사에서 전국적인 집유, 납유거부 투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6천호 낙농가족 모두는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성공적인 투쟁을 창출하였다. 이는 각 도(연합)지회를 중심으로 한 전 낙농가족 모두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다. 낙농역사 뿐만 아니라 농민투쟁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당면한 우유문제였지만 단지 낙농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수확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향후 농민 투쟁의 방향타를 제시함으로써 농민단체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혁신적인 선도단체로서의 위상도 드높였다.

원유가격 연동제와 낙농제도 개선

원유가격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면서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결의하였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생산자, 수요자, 정부 모두 원하는 바다. 지금과 같은 극한 상황과 대립 속에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득이 될게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생산자들이 납득할만한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 방식 개선에 있다. 협회에서는 통계청에 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0월 19일 통계청을 상대로 한 생산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생산비 조사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자가노임은 일본과 같은 적용기준에 맞추고, 짓소의 내용연



수는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시간은 통계청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낙농가들의 작업 준비시간, 외부교육, 집회, 기타 목장 경영에 필요한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키로 하였다. 또한 생산관리비 비목을 신설하여 컴퓨터수리비, 자동차비에 대한 비용도 별도항목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협회와 조합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원유가격 연동제와 관련해 대응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청 생산비 조사의 올바른 개선을 전제로 한 원유가 연동제 도입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유가 연동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방식이 개선되는 것은 지난 원유가 현실화 투쟁을 통해 보여준 낙농가의 힘이라고 본다.

낙농제도 개선은 역시 이전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손도 못된 채 낙농가와 유업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생산쿼터는 생산량을 크게 웃도는 225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FTA에 대비한 생산쿼터 설정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추진 후 민간유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계적 집유일원화를 이루겠다는 것

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문제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었지만, 유업체 측은 당초 약속대로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유대산정체계 개선안을 번복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원유가격 협상에서 체세포 등급의 인센티브가 인상됨에 따라 농가의 수취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년간 농가수취가격을 재산정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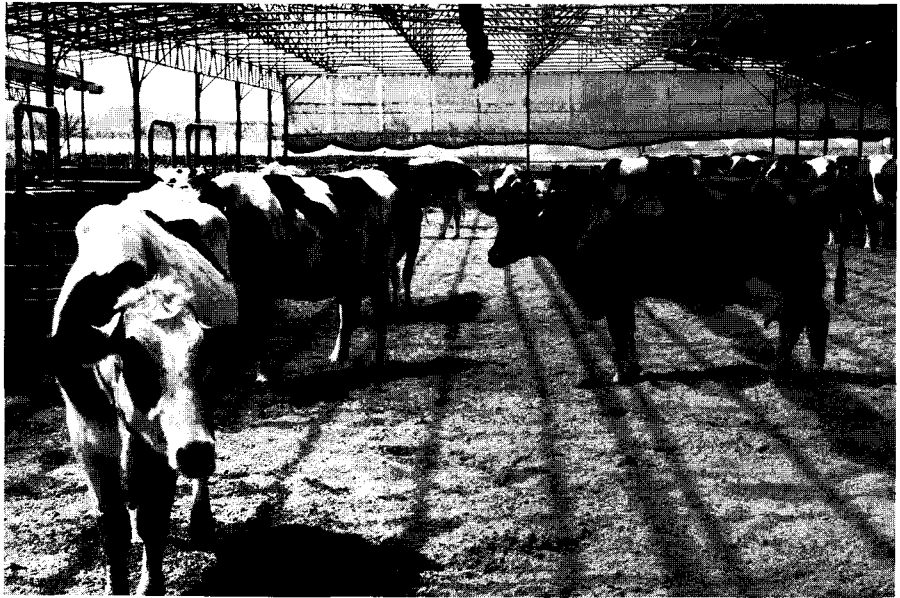
구제역 다시는 재발 말아야

이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협회는 내부상황실을 운영하며 구제역 확산방지에 매진하였다. 지난해 유대손실 보상을 반영시켰으나, 지난 연말 다시 발생한 구제역으로 36천두의 젖소가 매몰되면서 소 값이 뛰었고 살처분 당시의 보상금으로는 입식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살처분농가의 고통이 더해졌다. 현실적이지 못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살처분농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부당성을 호소하고, 농식품부 장관면담, 국회건의활동, 기재부 방문을 통해 부족하지만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입식자금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방역관련 제도개선 활동으로 백신접종 전환에 따른 살처분 정책으로의 전환을 건의하여 감염개체만 매몰하는 부분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토록 반영시켰다. 보상기준과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대책을 촉구하고 낙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제역 피해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에서 한달간 농성하며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는 산파역할을 했다. 낙농가 상생을 위한 희망젖소 나눔운동도 전개하면서 낙농가족 간의 온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미 FTA 국회비준과 낙농업 피해대책

한미 FTA 국회비준이 여당 단독으로 졸속 처리되었다. 정부는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확대와 국내 조사료 재배 확대를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육성우 목장 조성, 젖소 개량사업 지원등을 FTA에 대비한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에 대비한 낙농제도 개선 논의는 앞서 제기한 바대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FTA로 인한 실질 피해대책은 아직 오



리무중이다. 현재 FTA 피해대책은 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낙농의 특성을 반영한 쿼터삭감 대책과 피해대책은 가시권에 들어와있지 않다. 또한,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완충장치로 배합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축산단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오히려 정부는 구제역, 물가안정을 빌미로 무차별적인 수입유제품에 대한 무관세물량을 개방하였다. 전지, 탈지분유 3만톤을 포함한 142.2천톤의 무관세 물량을 확대하였고, 내년에도 무관세물량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무관세물량은 국내수급과 연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와 달리 유업체와 식품업체의 이익만 불러주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 무관세물량 배정의 제고와 생산자단체인 협회로 배정기관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 이후 정부는 오히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축산단체들은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내년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무허가축사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정부분 반영하여 축산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축산업 허가를 내줄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부터는 백신비용 분담과 관련 전업규모인 50두 이상은 정부보조 50%, 자부담 50%로 책정해 놓고 있고, 구제역 양성농장에 대해서는 매몰보상금 20% 감액을 확정지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축산분뇨 대책이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축

산분뇨의 민원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처리시 처리시설 비용의 과다와 시설관리의 한계, 퇴·액비 품질의 불균일, 경종농가 신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가축분뇨 대책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영위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격동의 한 해, 낙농업 발전의 초석으로 삼자

구제역 파동은 원유부족 사태를 가져왔다. 유업체들은 원유확보를 위해 집유선 쟁탈전이 벌어졌다. 자사 소속 낙농가들에게 자금지원도 이뤄졌다. 급기야 정부는 집유선 동결조치를 내렸다. 우유가 남아 홀대받던 예전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어찌보면 구제역이 원유부족 사태를 앞당기긴 했지만, 계속적인 낙농가 폐업속출로 우유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원유수급은 남아도 골치 모자라도 골치지만, 우유가 없어 국민들에게 우유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는 연초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으로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을 한시적으로 5% 증량하고, 인수도시 20% 회수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현행 15일 정산방식에서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하였다. 유업체들의 쿼터증량도 뒤따랐다. 학교우유급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급대책도 열렸다. 그나마 우유가 모자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언제 또 우유가 남아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을 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빌미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막대한 무관세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전술했듯이, 지난여름 원유가 현실화 투쟁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위기였지만 낙농가의 어려움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제 국민들은 낙농가들이 얼마나 어렵게 우유를 생산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 협상 결렬과 동시에 납유 재개 선언을 두고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무기를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에 오히려 박수를 보냈다. 우유공급중단과 재개선언 사이에 모든 언론의 중심에는 우유와 낙농가가 있었다. 격동의 한 해를 보내며, 다시는 우리 우유가 홀대받는 일이 없이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낙농역사는 매번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 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젠 이 힘을 바탕으로 낙농업 발전의 초석을 세울 때다. ☺

“원유가 현실화 투쟁의 저력으로 올바른 낙농제도 개선을 실현하자”